

과학포상제도, 권위 높이고 연구활동 활성화해야

글 | 권영일_ 사이언스타임즈 논설위원 sirius001@paran.com

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노벨상을 목표로 만들었던 ‘최고과학자’ 상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생긴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없어지거나 상금이 크게 줄어들 운명에 처한 것이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미국 과학전문저널 ‘사이언스’ 발표 논문 조작 파문의 후폭풍 때문이다.

김우식 신임 과학기술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과학자를 선발하고 격려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에게 30억 원이나 되는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고과학자상 제도의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고과학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억 원씩 최대 5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고 후원회 결성 등 연구 환경과 각종 경제·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황 교수는 지난해 6월 최고과학자 1호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상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황 교수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비난을 받았다. 최고급 과학자를 키운다는 당초 취지의 최고과학자상 제도가 엄청난 상금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계에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많은 연구비를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낫다”며 R&D 지원에 대한 개편을 시사했다. 최고 과학인을 위한 제도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임기응변식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2001년 상훈법 개정 과학기술훈·포장 신설

과학기술자들에게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임금 및 각종 인센티브 형태의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존경, 사회적 지위, 자긍심, 지적 만족감 등 사회적 보상이다. 금전적 보상은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보상은 직업 활동을 위한 개인의 정신적 만족과 사기 측면에서 의미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 이어서 금전적 보상 외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보상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상에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훈·포상제도, 시상제도, 상금 등은 유형의 보상이다. 반면, 과학기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 사회적 지위나 권위, 사회적 발언권 등은 무형의 보상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다양한 훈·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오랫동안 독립된 훈·포장 없이 업적의 성격에 따라 국민훈(포)장이나 산업훈(포)장을 수여해 왔다. 그러나 이 상은 학술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공적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뛰어난 업적에 대한 훈·포장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일반 국민은 물론 과학기술자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계는 이에 따라 독립적 과학기술훈·포장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 2001년 상훈법을 개정(2001. 1. 8. 법률 제6342호)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을 신설했다.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서의 이외에도 훈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창이 있다.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과학기술 훈·포장, 표창의 종류

구분	훈 포 장	표 창 (상)
근 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종 류	12종, 각 5등급 (무궁화대훈장 제외)	공적상·창안상·우등상·협조상 (진흥유공자는 공적상에 해당)
종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장 • 혁신장 • 웅비장 • 도약장 • 진보장 • 과학기술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출처 :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

공공기관 혹은 과거 유관기관이 주도하는 주요 시상 개요

종 류	재정연도(주기)	시상개요	시상인원	주관기관	시상시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1968년(2003년 확대개편)	대통령상 및 상금 3억 원	4명 이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매년 과학의 날(4월 21일)
한국과학상	1987년	대통령상 및 상금 5천만 원	4명	한국과학재단	출수해 2월경
한국공학상	1984년	대통령상 및 상금 5천만 원	4명	한국과학재단	짝수해 2월경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997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5백만 원	연 12명	한국과학재단, 서울경제신문	매달
젊은과학자상	1997년	대통령상, 3년간 매년 연구비 3천만 원	연 4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매년 2월
벤처기업인상	91년	과기장관상, 환경사장상, KTB사장상	매년 5명	KTB,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과학문화상	2000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1천만 원	매년 3명	한국과학문화재단	매년 과학의 날(4월 21일)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2001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1천만 원	매년 3명	한국과학재단, 동아시아언스	매년 12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2002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1천만 원	매월 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일보	매달
올해의 테크노CEO상	2002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1천만 원	매년 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매년 12월
올해의 과학교사상	2004년	과기장관상 및 상금 1천만 원	매년 40명	한국과학재단	매년 12월
장영실상	1991년	과기장관상 및 50만 원	연 52제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매일경제신문	매주
한국원자력기술상	1993년	정부포상	연 6명	과기부	
세종문화상	1981년	5백만 원	과학기술부문	문화관광부	
서울시문화상		5백만 원	기초과학생명 과학 부문	서울시	
학술원		1천만 원	기초과학, 응용과학 부문	학술원	

등이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포상을 해마다 과학의 날(4월 21일)에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훈·포장 이외에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는 10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과학기술진흥유공자포상,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젊은 과학자상, 벤처기업상,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올해의 테크노CEO상, 올해의 과학교사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몇몇 상을 제외하고는 권위와 인지도가 크게 떨어져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적극적 홍보·효율적인 운영 시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400여 명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과학기술 시상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훈·포상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훈·포상 제도가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기여한다는 응답이 39.4%,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로 비슷했다. 또한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훈·포장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중립적 견해를 보였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볼 때, 훈·포장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점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호소력 있고 효과 있는 훈·포장 제도 운영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상금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1인당 상금 500만 위안(약 8억 원)인 국가과학기술상을 매년 시상한다. 한국에서는 최고과학자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의 3억 원이 최대이다. 물론 과기분야 포상의 목적이 물질적 지원보다는 과학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한 물질적 보상은 포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실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등 몇몇 시상제도가 물질적 포상 혜택을 높여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에 따르는 부상과 혜택이 다른 분야에 대

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스포츠부문에서 포상자들이 받는 물질적 혜택과 과학기술 포상을 비교할 때 후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분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각 분야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특정분야가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될 때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재조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수상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다시 말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활성화해 정부나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시상과 수상자가 속한 조직내에서의 보상이 보다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이공계에 우수 인력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도 포상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 비해 보수는 낮고 사회적인 위상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포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포상제도 확대는 필요하다. 고시 출신보다 과학기술자들이 더 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물질적 보상은 포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상행사에 대한 배려나 홍보를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상자가 수상을 진정으로 명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수상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그 국가의 대표적 과학기술 분야의 수상의 경우 수여식에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의 최고 수반이 직접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상식 보도뿐만 아니라, 수상자와의 인터뷰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자를 일종의 역할 모델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행사 등을 통해 수상자 개인의 자긍심이나 명예를 고취할 수 있음은 물론 과기분야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는 “과학기술계에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부터 조성돼야 한다”며 “영화계의 시상식처럼 과학자들도 자주 모여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장애물은 있다. 스타과학자 탄생을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과학기술계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풍토를 꼽을 수 있다. 남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게 현실이다. 유명세를 타거나 대중적인 지명도를 얻는 과학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과학자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거나 대중적인 활동을 할 경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연구에나 더 힘쓰라는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에게 그에 걸맞은 포상을 하고, 또 그를 스타과학자를 만들어 과학대중화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㉔

민간 재단의 주요 과학기술분야 시상제도

상(주요기관)	시상분야 및 내역	시상 업적(기준)
호암상 (삼성복지재단)	• 과학상 • 공학상 • 의학상 부상 : 각 1억 원, 연구비 : 2년간 각 2천만 원 내외	기초과학, 응용과학, 의학에 공적이 많은 연구자 또는 단체
인촌상 (인촌상 운영위원회)	• 교육 • 학술 • 산업기술 • 언론출판 • 봉사 • 문학 6개 분야 각 5천만 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5·16민족상 (5·16민족상재단)	• 학술 • 예술 • 교육 • 사회 • 산업 • 안전보장 6개 분야 각 2천만 원	인문과학,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3·1문화상 (3·1문화재단)	• 학술 • 예술 • 기술 • 사회봉사 4개 분야 각 2천만 원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연구 저작 발표를 계속하는 자로 획기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